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배진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2.

발 의 자 : 배진교 · 강은미 · 김홍걸
류호정 · 민형배 · 심상정
양정숙 · 이은주 · 장혜영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사(公私) 단체(이하 “관계기관등”이라 한다)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“군인등”, “군인권침해등”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·준사관·부사관·병(兵), 사관생도·사관후보생·준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,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).

나.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6항 신설).

다.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5항 신설).

라.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(안 제48조제1항).

마.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,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,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(안 제50조의2 신설).

바.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(안 제50조의3 신설).

사.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, 위원,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5 신설).

아.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·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7 신설).

자.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각하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(안 제50조의8 및 제50조의9 신설).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군인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
군인

나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사관생
도·사관후보생·준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생, 소집되어 군에 복무
하는 예비역·보충역, 군무원

7. “군인권침해등”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
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
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.

8. “군인권보호관”이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
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3명”을 “4명”으로, “11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2항제1호 중 “4명”을 “5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4명”을 “5
명”으로, “1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이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지명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”를 “상임위원회, 소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34조제1항 중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”을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권 침해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제5항까지를”을 “제6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정하면 그”를 “인정하면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”로 한다.

제4장의2(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6) 및 제4장의3(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0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

제50조의2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.

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업무는 제외한다)를 총괄한다.

③ 군인권보호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.

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,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과 전문위원회의 구성·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·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0조의4(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)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의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, 제5호, 제6호,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.

1.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(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)·제도·정책·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
2. 군인권침해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·개선의 권고
3.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
4.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
5.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
6. 군인권침해등의 유형,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
7.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
8.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
9. 그 밖에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50조의5(군부대 방문조사) 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,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

군부대(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, 일시,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할 수 있다.

③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, 위원,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등”이라 한다)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다.

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,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의6(준용규정)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.

제4장의3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한 특례

제50조의7(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·수사의 입회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입회가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50조의8(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

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.

②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,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9(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, 시설,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군인권침해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,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(이하 “자료제출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,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.

제50조의10(준용규정)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 장에

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장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등 사건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심의·의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지명할 당시 제5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“ <u>군인등</u> 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 <u>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군인</u> 나. 「 <u>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</u> 」 제3조에 따른 <u>사관생도·사관후보생·준사관후보생·부사관후보생</u> , <u>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·보충역</u> , <u>군무원</u> 7. “ <u>군인권침해등</u> ”이란 제30조 제1항에 따른 <u>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</u> 를 말한다. 8. “ <u>군인권보호관</u> ”이란 「 <u>군인</u>
<u><신설></u>	
<u><신설></u>	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.

1. 국회가 선출하는 4명(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)

2.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(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) <후단 신설>

3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제24조(시설의 방문조사) ① 위원회(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·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-----4명-----
-----13명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-----5명-----

2. -----5명-----
-----2명----- 이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지명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시설의 방문조사) ① ----
---상임위원회, 소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
시정 권고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
④ (생략)

<신설>

⑤ · ⑥ (생략)

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
조)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
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
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
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
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
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
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
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
의뢰할 수 있다.

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
시정 권고) ① ~ ⑤ (현행과
같음)

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
지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
점검할 수 있다.

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군 내 인권을 개
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
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
과 협의할 수 있다.

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
과 같음)

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
조) ① -----

-관할 수사기관의 장(군인권침해
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
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-.

② (생 략)

제44조(구제조치 등의 권고) ①
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
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
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
준용한다.

제48조(긴급구제 조치의 권고) ①
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
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
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
성이 있고, 이를 방치할 경우
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
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
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
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
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, 그
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
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구제조치 등의 권고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제6항까지를--
-----.

제48조(긴급구제 조치의 권고) ①

-----인정하면 즉
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

권보호위원회

제50조의2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
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

<신 설>

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
위원이 겸직한다

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
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
관련 업무(「부패방지 및 국민
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
른 고충민원 처리업무는 제외
한다)를 총괄한다.

③ 군인권보호관이 결원된 경
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
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
다.

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
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
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
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
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.

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
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군
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
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
군인권보호위원장이 주재하며,
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

<신 설>

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,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과 전문위원회의 구성·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·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0조의4(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)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의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, 제5호, 제6호,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.

1.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(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

을 포함한다)·제도·정책·관행
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
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
는 의견의 표명

2. 군인권침해등에 대한 조사와
구제 및 시정·개선의 권고

3.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
사 개시

4.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
실태 조사

5.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
과 홍보

6. 군인권침해등의 유형, 판단
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
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

7.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
조

8.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
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
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
과의 협력

9. 그 밖에 군인권침해등의 예
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
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
사항

제50조의5(군부대 방문조사) ①

<신 설>

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,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(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, 일시,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할 수 있다.

③ 국방부장관은 군사·외교·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

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, 위원,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등”이라 한다)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및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,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의6(준용규정)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.

제4장의3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한 특례

제50조의7(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·수사의 입회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(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

<신 설>

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 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입 회가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 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 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50조의8(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 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 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.

②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 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 구하고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회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,

<신 설>

<신 설>

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
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
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9(조사의 방법에 대한
특례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
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
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
설을 방문하여 장소, 시설, 또
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
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군인권침해등 사
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
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,
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
사 또는 감정(이하 “자료제출
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고 하는
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
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하여
야 하며, 제36조제7항제2호에도
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
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
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
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.

제50조의10(준용규정) 군인권침해
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하여

<p><u>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제4장을 준용한다.</u></p>
